

‘고독사’ 증가하는데 예방대책·안전망 구축 미흡

무안서 50대 사망 사흘만에 발견
최근 5년 광주 551명·전남 503명
‘예방법’ 제정 불구 구체방안 부족
시·도, 위험군 발굴 전수조사 추진

광주·전남에서 홀로 생활하다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孤獨死)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고독사 위험군 전수 조사, 고독사 예방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안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30분께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에서

A(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나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 거주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1차 검시 결과 최소 3일 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평소 지병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24일 오후 4시38분께 순천시 풍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웃으로부터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가족과 떨어져 해당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은 홀로 살던 B씨가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간 광주·전남에서 1000여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다.

광주는 △2017년 105명 △2018년 104명 △2019년 113명 △2020년 118명 △2021년 111명 등 총 551명이다.

전남은 △2017년 77명 △2018년 87명 △2019년 101명 △2020년 114명 △

2021년 124명 총 503명이 고독사로 사망했다.

매년 100여건이 넘는 고독사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양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미비해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고독사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은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해 상징적 입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된 4년 동안 고독사의 정체가 세 차례 변경되면서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가 불분명해져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예방 대책 마련

이 시급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수 조사 실시와 안부 살핌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5월 한국전력과 ‘전력데이터 활용 고독사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AI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1인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9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2개 시·군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정 방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디지털 성범죄 ‘폭증’... 수사인력·피해자 지원은 태부족

광주·전남 수사인력 각 5명
지원센터 3년새 직원수 반토막

딥페이크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합성물 유포 수사를 맡고 있는 광주·전남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 인력이 10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직원 수도 3년간 절반으로 감소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에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9430건이었으나 지난해 2만127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예방, 단속을 위한 전담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의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 인력은 2019년 5명, 2020년 6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5명, 2024년 5명이다.

전남경찰도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로 2019년 4명, 2020년 4명, 2021년 4명, 2022년 4명, 2023년 5명, 2024년 5명에 그쳤다.

지난 2019년에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엔(n)번방’ 사건을 겪고도 경찰 전담

수사 인력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게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9억5000여만원(6.5%) 삭감됐으며 인력 운영비를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센터는 24시간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로부터 삭제 신청을 받으면 해당 플랫폼 기업에 삭제 요청을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센터에 삭제 요청된 불법촬영물 건수는 2021년 16만6000여건, 2022년 20만6000여건, 2023년 24만3000여건으로 매년 최소 3만건 이상 크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지난해 디성센터 직원은 총 39명으로 2020년에 비해 28명(58.2%) 감소했다. 일손 부족으로 직원 한 명당 약 800여건의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셈이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신중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북구, 다문화가정 전통음식 체험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들이 4일 추석을 앞두고 북구 문흥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상 차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건호 기자

처벌에 불만 품고 가게 물품 훼손한 60대 구속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음식점 업주에 불만을 품고 물건을 파손한 60대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둔기로 음식점 유리창을 부수고 간판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초 광주 광산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 둔기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간판 전선을 뜯은 혐의다.

해당 가게 고객이던 A씨는 과거 주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가게를 여

러 차례 방문, 이후 가게 주인의 신고로 스톱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정성아 기자

【붙임 2】 공고 제 2024-4호

2025년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제안서 공모 안내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광주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 정책수립, 현안문제 조사연구, 산학협력기술개발 등의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공모함

- 추진목적
○ 광주지역의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조사/환경기술개발/산학협력 과제 발굴/선정하여 광주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친환경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공모분야

분야	공모 내용
산학협력	■ 광주지역 환경분야 유망 라이징 스타기업 발굴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연구 ■ 지속가능한 환경유지를 위한 오염물질 저감 및 자원회수 기술개발 연구 ■ 환경분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공정개선 및 신기술 개발연구
기술개발	■ 환경현안 문제해결 기술의 실증을 위한 기획연구과제 ■ 민원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따른 환경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현안과제	■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대기질 개선 등 대기분야 기술개발 연구 ■ 수질개선 및 안전한 수자원 확보 등의 수질분야 기술개발 연구
폐기물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정책마련, 폐기물 분야 기술개발 연구
정책조사	■ 정부/지자체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및 방향 제시 마련을 위한 연구 (단, 법령에 의거한 법정과제는 제외)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분석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기타	■ 광주지역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 현안과제는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간담회를 통해 선정된 주제로 현안과제를 산학협력력으로 제안 시, 우선선정 대상임

- 연구과제 선정절차

과제공모	사전검토(자체규정)	자문위원회	환경부	중앙센터	영산강유역환경청
내부심사	정책합동심도	적정성타당성검토	연구제안서선정	연구핵심지공모및선정	행정협의회사업계획의결
준비(24.9월)	1단계(24.10월)	2단계(24.10월)	3단계(24.12월)	4단계(25.1월)	5단계(25.2월)

- 연구사업 지원 규모 및 방법
○ (과제수) 3건 내외
- 지역 현안 해결 연구과제로 산학협력연구권 우선 선정 (공모분야 참조)
○ (연구비) 과제당 50백만원 내외
- 산학협력 과제외의 경우 기업 부담금 (30%, 현물포함), 외부기관의 출연금이 많을수록 우선 선정 가능
- 외부기관 지원금이 있을 경우, 효과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연구비 중액 예정
- 과제수/지원규모는 2025년 환경부 예산편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된 연구비는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기간) 2025년 2월~11월말
■ 공모 (안) 제안시 유의사항
○ (중복여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추진 중인 환경관련 연구,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진한 1999-2024년도의 연구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과제제안
○ (성과활용) 연구성과를 필히 달성할 수 있는 과제 제안
- 정책 반영: 정책 수립 및 근거자료 / 민원대응 및 해소 / 추가사업 반영 등
- 학술 활용: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SCI·BIO, 단, 학술발표는 제외)
- 특허출원 및 등록: 특허 출원 / 등록 및 실용신안 등록
- 사업화: 실시계약을 통한 사업화
○ (기타) 녹색환경지원센터 세부운영규정 별표 10 항목에 의거하여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아래의 기술료(연구결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 기준)를 센터에 납부(중소기업: 센터지원금의 10%, 중견기업: 센터지원금의 30%, 대기업: 센터지원금의 40%)

- 신청방법
○ 참가자격: 행정기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사회·시민단체, 기타 등
○ 제출기간: 2024. 9. 4.(수) ~ 2024. 9. 25.(수), 18:00까지
○ 제출서류: 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서(파일명: 제안자.hwp)
○ 제출방법: www.gjeec.or.kr 공지사항의 제안서 서식을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기한연수)

- 문의 및 제출처

담당자: 교육·연구 부장
주소: (우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제1산학협력공학과 301호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누리집: http://gjeec.or.kr
이메일: seheerim@daum.net
전화: (062)230-3991, FAX: (062)530-3994

2024. 9. 4.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권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